

다산포럼



한재훈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국록을 먹고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들 자체가 저러서야, 저 사람들을 어찌 믿고 나라일을 맡기겠느냐?” 이는 정통 유학의 마지막 선비이자 개인적으로 나의 스승이기도 한 겸산(兼山) 안병탁(安秉奭, 1904-1994) 선생의 말씀이다. 선생은 대한제국 시기에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나 조선의 정통 유학을 공부하였고, 망국의 백성으로서 상복을 입는다는 심정으로 평생 백의(白衣)만을 고집했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였다. 선생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다 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했다. 향년 91세로 별세하신 선생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번의 공직 선거를 겪었지만 한 번도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 선생이 투표를 거부한 중요한 이유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저 사람 말고,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선생에게 이런 모습은 이미 그들 중 누구도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NGO 칼럼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경찰이 학동 참사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자치21은 이 발표가 수사의 마무리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라 참사의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동 참사 초기 언론의 보도와 경찰의 수사는 안전 조치 미비, 불법 하도급에 맞춰져 있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일반 건축물 철거 공사를 수주할 때 평당 28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재하도급을 거쳐서 평당 4만 700원까지 내려갔다. 재하도급을 맡았던 백술의 사장이 작은 이윤이라도 챙기기 위해서는 공기를 단축하는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사고의 이면에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인 다원 측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 살수를 지시해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학동 참사의 원인이 원청의 부당한 불법 하도급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한 원청에 대한 수사의 칼날은 무디기만 하다. 이 사건으로 갇힌 사람은 백술의 사장과

기고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최근 추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곧바로 드는 생각은 ‘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려는 것일까’였다. 요즘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말한다. 전국 지자체 약 50여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다 전국의 모든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만 같다. 어디에나 다 있는 케이블카라는 콘텐츠가 과연 지역을 살리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 케이블카에 ‘신기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번 타 본 경험이 생기면 그 뒤로는 그 지역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각 지역의 케이블카 이용객 수 현황을 보면 설치 후 몇 년 간은 이용자가 늘지만, 5년을 넘으면 대부분 크게 감소한다. 곧바로 적자로 전환된다. 케이블카 설치 지역들을 살펴보면 왜 관광객들이 한번 타고 다시 오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대부분 케이블카 탑승시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한다.

공직(公職)의 무거움

증거였고, 따라서 그들 중 누구에게든 표를 던져 선택한다는 것은 무의미했다.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하고, 철학과 제도 등 새로운 나라 운영의 초석을 놓았다. 경복궁(景福宮)의 이름은 물론 그 부속 전각들의 이름도 그가 지었다. 그는 근정전(勤政殿)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글에서 ‘천하의 모든 일이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은 필연의 이치’라면서 “사소한 일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정사(政事)와 같은 큰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일’이란 그 일을 수행하는 자의 행위가 불특정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강릉까지 세 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해서 간다고 해 보자. 만약 일상에 지친 어떤 사람이 동해를 보고 싶어서 간 것이라면 그 행위를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승객을 모시고 가는 버스 운전기사라면 그의 행위는 일이다. 일의 성질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公)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에서 ‘일을 할 때는 공경할 것을 생각하라’(事思敬) 또는 ‘일을 집행할 때는 공경하라’(執事敬)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경’은 두려움이 수반된 긴장감과 실수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어우러진 태도이다. 말하자면 ‘얕은 얼음을 밟듯, 깊은 못에 다가서듯’ 하는 태도이다. 일을 수행하는 나의 행위가 초래할 무거운 결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태도로 일에 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삼봉이

‘죽음의 카르텔’이 학동 참사의 원인이다

감리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깃털 몇 개 뽑아내고 말 것이라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더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더라도 재개발사업에서의 참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재개발사업에 얽매려 자리한 불법적 카르텔이 끊임없이 불법적인 상황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불법의 카르텔은 10년 동안 서로를 보듬으며, 끈끈히 연대한다. 우선 시공사는 이 10년의 기간 동안 매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사업 진행비를 낸다. 여기에는 약 800만 원에 달하는 조합장의 월급과 활동비, 그리고 건설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들과 재개발조합 직원들에 대한 수천만 원대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부동산개발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드는 비용은 별도이다. 이 대가로 시공사는 재개발조합의 도움을 받아 고가의 분양가로 시공권을 따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쟁긴다. 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조합 활동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철거 공사와 관련된 이권, 때로 임대주택 운영권과 처분권을 차지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다. 이번 학동4지구 조합장인 조모 씨가 두 차례 재개발 사업 조합장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 돈으로 인근의 앞차배기 건물들을 사들였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런 저간의 사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소위 가족과 지인 중심의 자본 쯤

말한 ‘부지런함’과 공자가 말한 ‘공경함’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표방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選舉)이다. 국민은 주인으로서 선거를 통해 공직을 수행한 사람의 잘못을 직접 심판하거나, 더 잘 수행할 사람을 직접 선택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과거 임금에 모든 권력을 행사하던 군주주의(君主主義)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군주주의든 민주주의든 기본적으로 일이 갖는 무거움은 다르지 않으며,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일’도 결국은 공직에 부여된 일을 잘못 수행할 사람을 심판하고, 더 잘 수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이면 한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과 지역 행정을 담당할 각 단위의 단체장들을 함께 뽑는 선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선거에서 선택받기 위해 뛰는 후보들에게 ‘사양지심’(齎賞之心)을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일이다. 후보들은 각자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부각해야 하고, 또 주권자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제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금도(襟度)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 때마다 다 훌륭한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이다.

社說

학동 재개발 특혜 분양 의혹 끝까지 파헤쳐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과정의 특혜 분양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총당이나 조합원 자본 누락·착오 등에 따른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 놓는 보류지(保留地)가 규정보다 네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 내 보류지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고시될 때 88개였으며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는 92개까지 늘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이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 인가를 받도록 했다. 규정대로라면 학동 4구역의 보류지는 전체 2282세대의 1%인 22세대 이내여야 한다. 한데 조합 측은 당초 이보다 네 배나 많은 세대를 동구에 신고했다. 동구는 이

처럼 과도하게 많은 보류지를 승인해 주면서도 조합 측 판단 근거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분양권을 늘리는 ‘자본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친인척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확보하려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살피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 관계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무성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은 자본 쪼개기로 확보된 분양권이나 보류지 소유권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늘어난 분양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는 없었는지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특히 분양권을 둘러싸고 지역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다 새는 청와대 검증의 성긴 그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엇그제 전직 경찰됐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88일 만인데, 반부패비서관은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자리다. 논란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촉발됐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 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이 91억 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 원에 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 직면했다. 또한 변호사 시절에 매입한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전날 “해당 토지는 도로가 개설된다 해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민심이 들끓자 김 비서관의 사표는 신속히 수리됐지만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LH 사태가 터진 후 지난 3월11일 비서관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했으며 “의심 거리가 없다”고 발표했다. 한데 불과 20일 후 투기 의혹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혹은 알고도 봐 준 것인지 김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물론 1가구 다주택 소유 공직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랬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제 청와대 검증의 그물이 너무 성기거나 크게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은 안전하지 않다’고 마치 제3차처럼 논평하고 넘어갈 일은 더욱 아니다.

無等鼓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1980년대 창작된 동요 ‘텔레비전’은 한 소절을 따라 읊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런데 작자 이 곡의 작사자이자 작곡가인 광주 출신 고(故) 정근(1930-2015) 선생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광주문화재단이 ‘근현대 광주 예술가들’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2021 광주학 콜로키움’을 통해 어린이문화운동을 펼친 작곡가 정근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비로소 알게 됐다. 양림동에서 태어난 그는 1954년부터 호남권 최

동요 작곡가 정근

그랬기에 정근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어린이의 세계와 동요에 몰입했는지 모른다. 그 설립한 신성보육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후 어린이 교육을 위해 우리말 로켓 말을 짓고 작곡을 했다. ‘새로나 합창단’을 창단해 소록도 나환자 위문 공연을 하는 등 음악 활동도 함께 펼쳤다. 1960년대 TV 시대가 열리자 광주를 떠나 서울로 옮긴 그는 KBS 어린이합창단 지휘자와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동요를 보급하고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기도 했다.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TV’를 통해 정철훈 전 언론인이 전해 주는 ‘정근의 동요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추월산에 케이블카가 웬 말인가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둘러본 후 다시 다른 주변 관광지 로 멀리 이동한다.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는 관광지라는 현실을 이해하면 과연 케이블카가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만 커진다. 실제로 관광 수요를 주장하지만, 정작 전국 22개 케이블카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흑자를 보는 지역은 고작 세 곳에 불과했다. 추월산의 경우 개발사는 4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개발을 하고 곳곳에 수익사업을 위한 자회사들을 두어 투자금을 회수하겠지만, 담양군 입장에서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부채 덩어리만 남기게 된다. 개발사는 기부채납을 명분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지역민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역민을 위한 판매장을 조성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곳은 개발사의 자회사가 독점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외딴어진 곳에 대충 조성한다. 결국 지역민은 그저 둘러러기 될 뿐이다. 현재 추월산 케이블카의 진행 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담양군은 개발을 발표하고, 군의회와 군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고작 한 차례 용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이것을 빌미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환경부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문제를 지적하자 계획을 몇 차례 수정했다. 정작 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절차상

변경된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조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왜 굳이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주장을 할까? 우리가 가진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오히려 더욱 아껴 미래 세대에게 연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언제나 똑같은 논리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쓰고,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환경 훼손이 분명히 자행되고, 실제로 케이블카가 조성된 곳에 가보면 나무 한 그루, 심지어 풀 한포기 없는 곳으로 만든다. 게다가 2019년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케이블카 중 매표소에 장애인인 스스로 표를 살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된다. 매표소에서 별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도 17.6%에 그치고 있다. 사유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도 50%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현재도 연중 행사로 장애인 시승 행사나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가 정말 좋다면 필요한 곳에 설치하자. 독일 베를린이나 터키 앙카라 같은 도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지역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